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전에 법조계 ‘갑론을박’

광주지검, 최후 안전망 강조... 법무부도 사례집 발간 법조계 “부적절한 정치검찰의 업보... 일단 회수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는 주장과 “회수 후 단계적 부여”라는 비판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는 장치라고 강조하는 반면,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권한을 정비하고 확대하는 구조가 수사 책임

의 명확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중우 광주지검 검사장은 23일 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가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역을 국민을 보호하는 형

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일부만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확대 규명했다는 설명이다. 광주지검이 2022년 12월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던 보험사기 사건을 추가 수사로 밝혀낸 사례와, 같은 해 불송치 처분됐던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을 장흥지청이 재수사에 실체를 규명한 사례 등을 들었다. 김 검사장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구속 사건이 나 공소사유 임박 사건에서 경찰에 제이송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는 별개의 문제로,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교차 검증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말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폐지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 특정 방향성을 강조하는 사례 공개는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이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설명한 대목에 대해 “기관 간 협력보다 대립 구도를 강화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권한을 넓게 인정할 뒤 제한하는 방식보다, 우선 최소 범위로 조정할 뒤 실제 운영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더라도, 그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통제 장치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권한 유지 논리만 앞세울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악용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부적절한 정치적 검찰권 남용에서 비롯된 업보”라며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하되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음주 의심 사고·귀가 공무원 1심 무죄... 항소심은 벌금형

음주운전 의심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귀가했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중석 재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광주시청 공무원 A씨(48)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7일 오후 11시 10분께 광주 남구 한 술집 인근 도로에서 자택까지 약 1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자택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심은 경찰의 자택 진입과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수사에 해당,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화’ 등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배제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추가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음주운전 현상처벌의 최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술집 CCTV 영상에서 A씨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과 사고 직후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택에서의 음주 측정 결과 등 위법 수집 증거는 그대로 배제했다.

결국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효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지방선거 D-10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전국동시지방선거 D-100을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민 주요 사망 원인 ‘암·폐렴’

상급종합병원 병상 비율 특·광역시 ‘최저’

광주시민의 주요 사망 원인이 암과 폐렴,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광주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3일 광주와 다른 지역의 최신 건강지표를 정리한 ‘2025 광주시민 올해의 건강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광주시의 전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10만명당 308.6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폐렴 사망률은 10만 명당 26.3명으로 여전히 7

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광주시의 자살 사망률 또한 10만명당 26.2명으로 같은 기간 특·광역시 중앙의 증가 폭보다 크게 늘었다.

주요 사망 원인은 암(23.7%), 폐렴(10.7%), 심장질환(7.7%), 뇌혈관질환(5.8%), 자살(4.6%) 순으로 집계됐다.

폐렴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했으나, 광주에선 전체 사망자의 10.7%를 차지해 암 다음으로 많았다.

흡연율은 전체 16.7%, 남성의 30.2%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16.3%로 전년 대비 2.0%p 증가했다. 걷기 실천율은 전년 대비 6.3%p 증가한 53.0%였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74.3%로 7대 특·광역시 중 중앙값 수준으로 조사됐다. 암 검진 통합 수검률은 61.8%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광주시의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수는 159.6개로 7대 특·광역시 중 중간 수준이었다. 10만명당 입원실 병상수는 2677.3개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병상 비율도 15.4%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고난도·중증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비율은 4.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내 연구·정책정보 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산정 소송 패소

전남대학교병원이 176억여원의 명절휴가비, 야간간호료 등 통상임금 산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정영호 재판장은 전남대병원 직원 1905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176억3824만42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1월부터 2024

80%를 지급해 왔고, 고정 근로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간간호료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병원인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수가 중 70%를 야간 근무 횟수에 비례해 간호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누락된 시간급 통상임금

법원 “정기성·일률성 판단... 176억원 지급” 주문 일부 소멸시효 인정... 누적 적자에 병원 재정난 우려

년 12월까지 지급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직원들은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간호사 야간간호료 등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야간간호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 7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일부 청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명절휴가비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추적이 있는 달에 봉급의

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가산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2015년 1~10월분 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조측이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년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미지급 수당 67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내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전남대병원은 의정갈등 기간 중 비상근로체계를 운영하며 진료·수술 등에 차질이 빚어졌고, 누적 적자가 15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문간공, 문춘공 정기총회

2026년 문간공, 문춘공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2. 시 간 : 오전 10시
3. 장 소 : 충주박씨 총재회관 502호

<부의 안건>

제1호의안 : 2025년 결산보고서(안) 및 2026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회장, 이사, 감사)
제3호의안 : 토지매각의 건
제4호의안 : 기타 토의사항의 건

※ 반드시 충주박씨 문간공, 문춘공 후손 본인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할 것.
※ 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참석여부를 불문하고 전 문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불참을 이유로 이의나 불복은 인정되지 않음.

2025년 02월 24일
충주박씨문간공,문춘공문중
연락처 : 010-3646-8807(회장 박종석)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25년 12월15일 해산간주 되어 2026년 02월 11일 해산등기를 하였는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23일
청년사회진흥지원사회적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도서관빌딩1층 융합인재교육원(용봉동)
청산인대표 인 영 호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인 신의도 찰나를 담다!

1004 신인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미지가 있으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좋아요·일람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박 자택의 성지, 전남 투룬산 대동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희사

광고·시정문의 062)370-7077